

신흥 강대국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실천

유희복*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국제안보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천 |
| II. 중국의 부상과 기존 국제질서 인식 | V. 결론 |
| III.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천 | |

| 논문요약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기초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제질서의 설계자이자 수립자인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해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중국은 이에 대해 자신은 기존의 국제질서 내에서 성장했으며 따라서 이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현상유지세력인가 수정세력인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간의 연구는 중국을 불만은 있지만 현상유지세력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국가성향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가성향을 규정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향후의 바람직한 국제질서, 기존 국제질서의 문제점과 중국의 지위와 역할, 중국이 주장하는 국제질서 등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은 중국이 기존의 국제제도와 규칙에 대해 꾸준히 불만과 수정의 요구를 제기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중국의 국가성향을 규정하기보다 중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비중을 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증강된 국력과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제도와 규칙에 대해 제기해 온 불만과 개혁의 내용 및 관련 행위를 검토한 후, 중국은 국제경제질서의 구축과 신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안보관을 통해 향후 국제질서에 대한 보완과 개혁을 추진하려 하며, 이것이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주제어: 중국, 신흥 강대국, 국제질서, 국가성향, 국가정체성

I. 서론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해 왔다. 이에 대해 글로벌 강대국인 미국과 지역 강대국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중국 위협론의 제기,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추진 등을 통해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확대시키며 중국에 대한 경계와 의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한 경계와 의심은 보다 포괄적으로 아태재균형 등을 통해 지속되어 왔으며, 그 기저에는 안보는 물론 경제, 환경, 인권 등 제반 영역에서 중국이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해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존 강대국들의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기존 국제제도의 설계자이자 수혜자들은 따라서 중국이 구상하는 변화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하려 할 것인가에 대해 경계 섞인 의구심을 갖고 중국이 모색 혹은 시도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려 한다.

세력전이론에 의하면 기존 강대국에 의해 형성된 국제제도에 불만을 갖는 신흥 강대국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수정을 가하려 할 것으로 간주된다 (Organski 1968, 366-367).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실제로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며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로 인해 중국이 수정세력인가 현상유지세력인가에 대한 관련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기존의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물론 해외 학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중국을 현상유지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¹⁾ 그러나 중국을 현상유지세력으로

1) 미국 내의 보수적 시각과 달리 중국을 현상유지적이라 보는 연구 사례들은 존 스톤(Johnston 2003), 강(Kang 2003; 2005; 2007), 부잔(Buzan 2010) 등이 있다. 중국은 자신이 현상유지세력임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세력/수정주의

보는 연구들도 비록 강도는 다르지만 중국이 기존의 국제규범과 질서에 일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향후 수정주의 성향으로 기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²⁾

본고는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국가성향을 규정하기보다는 중국의 불만과 그에 따라 국제제도와 규칙에 대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행위 및 인식의 분석을 통해 현상유지와 수정주의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중국이 수립하고자 하는 국제질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포착해 보려 한다.³⁾ 이에 따라 본고는 중국의 꿈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역 강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국이 기존 국제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여하한 형태로든 그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전제하고, 그 실천적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은 기존의 규칙과 제도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그 내용을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과 성명, 정부의 공식 문건, 학자들의 관련 담론과 주장, 현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몇 가지 영역에서 추진 중인 규범과 제도에 대한 수정이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세력이라는 이분법적 정체성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런 시각 자체가 서구 강대국의 혹은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라고 비판한다. 시양(Xiang 2001)의 경우, 오히려 미국이 규칙과 규범을 변경하려는 현상타파국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 2) 현실은 물론, 이론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성향 혹은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신현실주의 내에서도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는 각자의 안보 시각에 따라 국가성향이 각각 현상유지적, 수정주의적이라 보며, 세력전이론은 국력과 만족도에 따라 현상유지와 수정주의 성향을 구분하고, 세력의 평화적 전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연구자들도 기존의 이론을 재해석, 수정하거나 각자의 기준 혹은 모델을 세워 국가성향을 판단하며, 현상유지, 현상변경, 현상타파, 수정주의, 혁명주의, 보수세력, 개혁세력 등, 이분법적, 중복적, 연속적 개념을 포함한 용어들을 사용해 국가성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또한 국가성향이 고정적이거나 극명하지 않고, 성향과 행위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현상유지와 수정주의적 성향이 영역과 이슈에 따라 나타나거나 겹쳐져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비확산, 환경 레짐의 세 영역에서 중국의 이슈별 성향을 판단한 후 종합한 연구(Combes 2011), 중국을 “불만족한 ‘책임’ 대국”으로 본 연구(Breslin 2010)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3) 중국의 국가성향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포스트 냉전 시대의 현 상태(status quo)가 아닌 가야 할 미래의 상태(status ad quem)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패권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한 국제관계, 새로운 시대에의 적응 가능성에 의해 모든 국가의 향후 외교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omack 2015).

있음을 실천적 측면에서 보이고자 한다.

이상을 위해 본고는 다음 장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와 그것이 기존의 국제규범과 제도에 대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미국과 서구 강대국에 의해 설립된 기존 국제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국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기존의 국제규범과 질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취해 오고 있는 실천적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문헌검토와 중국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이 우선시하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천적 사례들을 먼저 3장에서 다루고, 안보적 측면에서의 사례들은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⁴⁾ 이에 따라 3장에서는 달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를 주축으로 하는 기존 국제경제질서에 대해 중국이 추진하는 현상 변경 노력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4장에서는 안보영역에서 UN 안보리의 역할과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개념인 신안보관,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이하 CICA) 등의 사례들을 통해 중국이 형성하고자 하는 안보질서의 모습을 살펴본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중국의 부상과 기존 국제질서 인식

1. 중국의 부상과 정체성 변화

1978년 개혁개방에 이어 1992년 남순강화로 개혁개방을 재확인하며 빠르게 성장해 온 중국은 2001년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빼앗긴 사이 WTO

4) 본 설문은 1월부터 2월까지 베이징과 상하이로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44명의 중국 국제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전자 우편을 통해 실시되었다.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질서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즉, 2001년 발생한 9.11사건으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동에 관심과 국력을 집중시키고 중국의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은 자신에 대한 최대의 견제세력인 미국의 관심에서 벗어나 소위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맞아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국의 국력을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중 있었던 2008년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노출시킨 미국식 자본주의와 달러 기축통화의 폐단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이어 중국이 다시 한 번 자국의 정치경제발전모델에 대한 모종의 자신감을 갖고 사회주의국가로서 그리고 대국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이익상관자이자 ‘G2’로서 책임과 역할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은 책임대국론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의 책임과 정체성을 부각시킨 ‘G2’에 부담을 느낀 데다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이용해 자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할 필요로 인해 대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더해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내세우며 대국으로서 책임은 지되 그 내용은 자신이 규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Kent 2013). 즉, 중국은 미국 및 서구중심의 기존 국제질서로의 편입과 함께 급속한 국력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국제제도에 대해 자의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최대화하되 의무와 손실은 최소화하려 했다.⁵⁾ 이는 2009년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중국은 이처럼 기존의 국제규범과 제도에 대해 수용과 수정이라는 전략적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는 중국의 정체성 변화 그리고 미국과 서구 강대국이 형성하고 유지해 온 기존 국제질서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전략적 기회의 시기’ 이전의 중국은 신흥 강대국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었고, 기존의 국제제도와 질서의 형성과 개혁

5) 김(Kim 1992)은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을 ‘최대/최소 원칙(maxi/mino principle)’이라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강대국들의 행위도 이러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원칙이 중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런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교토의 정서 탈퇴, 2017년 6월 초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등이 그러한 예다.

에 주도적으로 임할 수 있는 국력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성공적으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증강된 자신감과 종합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기존의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대해 개혁과 수정의 목소리를 내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자유무역과 투자 등 기존의 국제정치경제질서가 제공한 절대적 이익으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그 질서의 일부 특성과 상대적 이익의 측면에 주목하며 절대적 이익은 수용하되 상대적 이익의 재분배를 위해 기존 제도와 규칙의 개혁 혹은 수정에 나선 것이다.⁶⁾ 즉, 중국은 사회주의국가, 개도국 등, 기존 정체성에 더해 신흥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인정과 이익의 획득을 위한 전략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정체성은 사회적이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 또한 국가의 정체성은 그 국가의 대내 정책 및 대외 전략과도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위는 이익에 의해 추동되고 이익은 정체성에 그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Wendt 1992, 398). 중국은 비서구 국가, 아시아 국가, 사회주의 국가, 분단국가, 개발도상국가, 인구 및 국토 측면에서 대국이라는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19세기 중반까지 중화질서를 수립 및 유지시켰던 전통적 강대국이었으나 이후 서구 열강 및 일제에 의해 유린당한 경험과 기억을 되새기며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백년의 치욕을 뒤로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⁷⁾

6)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특성 중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합에 기초한 리더십’으로, 이는 사회주의국가라는 정체성과 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중국의 정체성 및 입장과 맞지 않으며, 중국은 기존 질서가 산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기존 질서 수립 주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집중 분배되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자신의 유무형적 상대적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7) 이 때문에 중국을 ‘신흥’ 강대국이 아닌 ‘부흥’ 강대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나 중화문명 ‘부흥’론 등이 그런 시각을 반영한다. ‘부흥’의 관점은 당연히 변형된 조공체계에 기반한 현대판 중화질서와 ‘신유교’, ‘조화세계’ 등에서 보듯 재해석된 전통적 중국 문화를 통해 중국적 세계질서를 논하게 된다. 비록 중국 스스로도 과거와 같은 중화질서는 재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형성 및 유지해 온 ‘기존 강대국’ 미국에 대해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흥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G2’가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중국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내세우며 국익을 추구하려 해 왔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책임을 언급할 때 중국은 이를 수긍하면서도 자신이 개도국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려 했다. ‘G2’는 초기에 ‘타칭’이었고 중국은 이를 경계하며 ‘C2’로 대체하려 했지만 이후 ‘G2’임을 ‘자칭’한 것이 그렇다. 책임대국을 자처하면서도 기후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의 모습, 사회주의국가로서 대내외적으로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이하 MES)의 인정을 요구하는 모습, 안보리를 포함한 UN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안보리의 이사국 수와 거부권 개혁에는 보수적인 모습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신흥 강대국의 정체성은 이처럼 그 국가가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유지세력’인지 ‘수정주의세력’인지, 혹은 ‘보수주의 국가’인지 ‘개혁주의 국가’인지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⁸⁾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이며 역할 특정한 이해와 기대이다(Wendt 1992, 397).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체성은 가변적인 것으로, 자신과 타자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생성, 변화, 소멸되며,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 사

오적이라고 인정하지만, ‘부흥’의 관점은 향후의 세계질서 내에서 중국의 역할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논의에서 역사와 문화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중국의 정체성을 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분명 유의미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 구조적 현실주의와 세력전이론은 안보, 특히 물질적 힘의 관점에서 현상유지와 수정주의 세력을 논할 수 있게 하지만, 외교와 제도 등 행위체 간 내적, 질적 차이를 논하지는 않는다. 자유(제도)주의와 구성주의는 경제성장모델, 소프트 파워, 안보관, 정체성처럼 비물질적, 인지적 관점에서 행위체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차이를 구별하고 국제규범과 제도의 질적 변화를 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론 틀의 복합적 활용과 함께 중국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회주의 대국, 신흥 강대국 등, 중국이 갖는 다양한 정체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익과 그에 따른 전략적 행위를 분석하고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 제도와 규칙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체성을 신흥정치체(新興政治體),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家), 그리고 신흥권력체(新興權力體) 세 가지로 분류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신흥정치체로서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 체도를 따르지 않아 비민주적인 국가로서 비판과 체제전환의 압력에 노출되어 왔고, 신흥공업국으로서 중국은 선진산업국들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등을 통해 국가의 역할 제한과 자유화 촉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신흥권력체로서 중국은 글로벌 권력구조 내에서 정치, 군사, 경제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서구의 권력에 맞서 주도적으로 국제안보와 정치경제 질서를 만들어갈 만큼 강하지 않다(牛新春 2014). 중국의 지속적 국력 상승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 연구가 분류한 중국의 정체성은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기존 국제 제도와 규칙에 대한 수정주의세력으로는 규정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중국의 국력이 꾸준히 강화된다면, 그에 따라 중국의 수정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보완과 개혁을 거쳐 수정주의 세력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리라 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먼홍화(Men 2014, 194-203)는 1982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강대국 지위의 추구를 중심으로 변화, 규정되어 왔다고 보고, 이를 제도, 사회-경제, 문화, 정치, 전략적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제도로써 중국은 ‘신형 사회주의 대국(a new type of socialist major power)’의 속성을 가지며, 사회-경제적으로 중국은 ‘개발도상대국(a large developing country)’이고, 문화적으로는 ‘풍부한 문화 자원의 전통을 지닌 대국(a great country with a rich tradition of cultural resources)’이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a responsible major power)’이며, 전략적으로는 ‘막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아태지역 대국(a major Asian-Pacific country of great global influence)’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향후 사회주의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유교를 비

롯한 중국 혹은 아시아의 문화와 가치의 확산을 위해 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 기존 제도와 규범의 개혁 또는 수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글로벌 강대국이 아닌 ‘제한적 강대국(partial power)’으로 규정했던 데이비드 샴보(Shambaugh 2013, 35) 역시 중국의 정체성이 다양하며 그로 인해 중국의 국제관계에 대한 시각과 역할이 단일하거나 일관되게 표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중국 엘리트들이 보는 중국의 국제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일곱 가지로 분류된다. 글로벌리스트(Globalists), 선택적 다자주의자(Selective Multilateralist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시아 우선주의(Asia First), 강대국(Major Powers), 현실주의자(Realists), 본토주의자(Nativists)가 그것이다(Shambaugh 2013, 22-36). 첫 번째 극단인 글로벌리스트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제도(institutions)에 완전히 관여하고 마지막 극단인 본토주의자(혹은 토착주의자)는 고립주의 경향을 보인다. 샴보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중국이 현실주의에 기초하되 강한 본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강대국 중심주의와 개도국을 중시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았다.⁹⁾ 이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제도와 규칙의 수용, 개혁, 수정 여부를 판단하고 행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강대국 및 개도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역할 및 행위를 선택적으로 조합해 목표이익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 내에 편입되어 기존의 국제규칙과 제도에 적응하고 또 이용하며 오늘날의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해왔다. 종합국력의 지속적 상승과 함께 미국에 이어 ‘2인자(老二)’로 스스로를 규정한 중국은 향후의 이익 추구를 위해 그동안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반영한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국제 규

9) 샴보(Shambaugh)의 분석이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으나, 2013년 시진핑의 공식 집권 이후 중국은 강대국 중심주의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도 강조하고 있으며, 아시아 우선주의와 글로벌리즘도 동시에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향후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신흥공업국가들을 규합하여 국제제도와 규범을 개혁,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칙과 제도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보완과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수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혹은 통합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국의 선택은 앞에서 본 중국의 몇 가지 정체성과 불만 그리고 기존 국제질서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Ikenberry 2008, 27).

2.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

국제규칙과 제도는 국가라는 행위체에 의해 수립되지만, 역으로 국가들은 그러한 규칙과 제도에 의해 자신의 행위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국제질서의 최상위에 위치한 국가 혹은 국가군은 국제질서의 설계자이자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이를 위해 스스로도 그 규칙과 제도에 순응함으로써 그 질서와 내재적 규범을 유지,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흥 강대국은 물론 기존 강대국도 기존의 규칙과 제도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현상변경이라는 선택과 추진은 쉽지 않다. 제도는 규범과 동의가 필요하고, 끈끈하며(sticky), 관성을 갖는 데다가 기존 강대국의 정체성과 이익에 부합되게 수립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가 수립하려 한 질서는 통합적(integrative)이고 확장적인(expansive) 성격의 질서였다. 이 질서 내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IMF, IBRD 등 다자기구에 의한 국제통화 관리와 무역 촉진을 통해 전후 경제회복에 이어 세계경제를 발전시켰다. 이 질서는 패전국 독일과 일본을 지역기구와 미국의 동맹 및 안보체제 내에 편입시키고, 마셜플랜으로 유럽을 부흥시킨 한편, 소련의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경제는 물론 안보의 통합적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발휘했다. 냉전 이후에도 서구, 특히 미국 중심의 국제 규칙과 제도는 소련의 해체로 인한 러시아와 독립 국가들

10) 이런 측면에서 자오쑤이성(Zhao 2016, 13-21)은 중국의 불만이 기존의 국제질서가 아닌 그 질서 내에서의 지위(position)에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을 개혁/수정주의 세력(reformist/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한다. 그는 따라서 기존 국제질서의 수립주체인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이 협상과 일부 규칙의 조정을 통해 중국의 불만을 수용한다면 중국은 혁명주의세력(revolutionary power)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을 서구의 질서 내로 편입시키고, 중국 역시 WTO에 가입시키며 그 유효성을 증명했다. 서구에 의한 이 기존질서의 성공과 지속 요인을 아이켄베리(Ikenberry 2008, 29-30)는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비차별과 시장개방성(nondiscrimination and market openness)의 규칙과 규범들,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합에 기초한 리더십, 셋째, 밀도 있고(dense) 포괄적이며(encompassing) 광범위하게 인정받는(broadly endorsed) 규칙과 제도 체계가 그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수립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이를 운영, 유지시키기 위한 규칙 및 제도는 설립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역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인권 등에 기초한 기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그에 내재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대응을 통해 성장해 왔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대부분의 중요한 다자기구 가입을 마치며 국제사회에 편입한 중국은 특히 2001년 전례 없이 까다로운 요구들까지 수용하며 준비해 온 WTO 가입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오늘날 중국의 신흥 강대국으로의 성장이 중국 스스로도 인정하듯 기존 국제질서와 규칙 및 제도의 수혜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중국이 기존 국제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시키는 규칙과 제도가 서구에 의해, 서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이익 분배 역시 서구 중심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자신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기존의 제도와 규칙이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국력과 그에 상응하는 이익 및 위상을 더 이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¹¹⁾

미국과 서구 중심의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을 정치외교, 경제, 안보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서구, 선진 강대국 중심의 기존 국제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평화공존 5원칙, 국제관계 민주화, 신형 대국관계, 신형 국제관계, 친·성·혜·용의 주변국 외교 등을 내세우며, 브릭스

11) 한스 모겐소(Morgenthau 2005, 5)에 따르면, 이익은 권력에 의해 규정된다. 그렇다면, 신흥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증가한 권력만큼의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며,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증가한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칙과 제도를 바꾸려 할 것임은 논리적 귀결이다.

(BRICS) 국가들과 함께, 제3세계, 개도국 혹은 신흥시장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반 담론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그 기저의 지식체계와 세계관으로서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대안적 혹은 중국적 국제정치이론을 구축, 확산시키려 한다.¹²⁾ 부분적으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이런 전략들은 규범적 측면에서 UN 헌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가 간 평등, 주권 불가침 등 중국이 1950년대 반동회의에서 천명한 평화공존 5원칙의 내용이 그렇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UN을 통해 내세우고 회원국에 대해 관철시키려 하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그러한 가치들의 보편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으로 다당제와 보통선거 등 민주주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서구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협상민주 등 중국 정치체도의 장점과 국가적 상황을 들어 자국의 정치체제를 변론한다. 중국은 그러한 가치와 제도들의 상대성과 특수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UN 헌장이 규정하는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서구의 시각과 해석을 단편적이며 일방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한다.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은 국방예산과 군사 기술력의 압도적 차이, 동맹과 파트너의 존재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대립은 회피하지만, UN, SCO, CICA, ARF, APEC 등 국제무대와 공식석상에서 신안보관,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 공동안보, 영합적(zero-sum)이거나 냉전적인 사고 탈피와 같은 주장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안보우려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제기하고 확산시킨 중국위협론과 미국의 군사적 포위 근거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주권과 내정불간섭을 내세우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사법기구의 권위와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UN 평화유지군의 운용에 있어서도 수용국의 주권과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주장하며 ‘보호할 의무(R2P)’에 의한 인도주의적 개입론에 이견을 보인다. 이는 인권보다 주권을 강조하는 중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UN 분담금의 증액, 평화유지군에 대한 지원과 파견인원 확대를 통해 미국의 UN에 대한 압력과 개입의 일

12) 김현준(2016)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갈등과 경쟁으로 보고, 이를 연성권력과 연결시켜 분석하고 있다.

방적 성격을 완화시키려 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의 행사를 통해서도 타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나 군사개입을 저지하고 미국을 UN의 제도적 틀 내부에 구속시키고자 한다.¹³⁾ 중국의 이러한 주장과 행위들은 미국과 그 동맹 주도의 기존 안보 규범과 제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불만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경제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중국은 IMF, WB, ADB, WTO 등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존의 국제무역, 금융, 개발기구에 가입하여 현재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자국의 빠른 경제발전이 단순히 기존 국제경제체제에 의한 것이거나 동 체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중국은 자신이 기존의 국제경제질서의 최대의 수혜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정책, 즉 중국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요약되는 소위 ‘중국특색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은 경제발전의 하나의 모델만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상황에 따른 다양한 발전 경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서구식 발전모델,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미국식 자본주의 발전모델과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며,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강해졌고, 특히 2008년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중국은 서구선진국들, 즉 G7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의 한계를 비판하며, 자신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 빈곤 국가들의 목소리가 UN에 더 많이 반영되고, 동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UN 경제사회이사회는 물론 G20 등 주요 다자회의에서 보다 폭넓은 주체들의 다양한 이익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은

13)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학자들은 UN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내용으로 평화 유지와 안전보장을 들었고(38.1%), 이어서 운영규칙과 제도(33.3%), 국제개발과 경제사회(26.2%)의 개혁을 꼽았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서구식 단선적 발전모델의 세계적, 일방적 확산과 그에 따른 결실의 특히 선진국에 의한 일방적 수확을 거부하며 ‘함께 상의하고(共商), 함께 건설하고(共建), 함께 누린다(共享)’는 ‘3공(共)’을 강조했다(『人民网』 2016/09/06).¹⁴⁾

중국은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국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발전의 길, 국가별 상황에 따른 발전, 그리고 세계 경제의 발전이 가져오는 이익의 보다 공정한 분배를 주장한다. 중국은 비록 ‘베이징 컨센서스’ 혹은 ‘중국모델’의 수출이나 확산을 공공연하게 추진하지는 않지만,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에서는 자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기존의 국제경제 규범과는 다른 발전 방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은 여기서 주권 존중을 내세우며 정치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규범적 차별화를 시도한다. 실제로 중국 주도의 AIIB는 환경, 투명성, 인권 등 규범과 운영상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념적, 정치적 조건과는 분리시키고자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기존의 발전모델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이념과 정치로부터 저개발국과 빈곤 국가들의 발전을 분리시킴으로써 부를 재분배하고 이들의 지지를 획득하려 한다.

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 내에서 성장해 왔고, 기존 강대국 미국에 대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기존의 국제 규칙과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국력의 신장과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이 강대국화를 위해 미국과의 국제규범과 제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¹⁵⁾ 그 영역은 먼저 국제경제, 그 다음은 국제안보인 것으로

14) ‘3공(共)’은 국제경제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으로, ‘공향(共享)’, 즉 경제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린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 ‘매우 그렇다(非常肯定)’를 포함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소 그렇다(稍微肯定)’고 대답한 비율과 ‘그저 그렇다(一般)’라는 응답 비율이 39.5%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국력이 여전히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이거나 기존의 국제 규칙과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타났다.¹⁶⁾ 이에 다음 장에서는 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천을 먼저 살펴본다.

Ⅲ.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천

1. 국제경제신질서 구축과 지역통합 추진 노력

중국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즉 ‘국제경제신질서’를 수립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국제경제신질서의 수립은 1964년 카이로에서 열린 제2차 비동맹국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후, 개발도상국들의 연합체인 G77이 제창한 데 이어, 1974년 5월 UN 총회에서 ‘국제경제신질서 수립을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채택되면서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초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당시 개혁개방 이전의 낙후된 경제체로서 국제경제신질서 수립을 적극 지지했고, 개혁개방 이후에도 국제경제신질서 수립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何力 2013, 75).

UN 총회가 채택한 국제경제신질서 수립 선언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¹⁷⁾ 하나는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기존 경제질서 하에서의 발전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개도국들 간의 불균형을 교정할 수 없고, 갈수록 선진국들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경제질서가 절대 다수의 개도국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통치에 의해 식민지 지위에 처한 상태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립된 질서라는 것이다. 총 20개의 국제경제신질서 수립 원칙을 담은 이 선언의 목적은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평등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국제경제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다(堀中浩 1982, 15).

16) 국제경제는 63.4%, 군사안보는 24.4%였다.

17) 채택된 선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유엔문서, <http://www.un-document.s.net/s6r3201.htm>. (2017년 9월 12일 검색)

이와 다소 다르게 국제경제신질서의 주요 특징을 주권의 평등, 공평과 호혜, 그리고 상호 의존 세 가지로 해석한 시각도 있다. 이에 차례로 따르면, 먼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자원과 경제활동에 대해 주권을 가지며, 국제경제의 문제 해결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향유한다. 다음으로, 무역, 금융, 화폐, 기술 등의 영역에서 선진국들의 통제와 착취에 반대하며, 개도국들이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상적인 조건들을 갖추도록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번영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를 늘리는 동시에, 공평한 기초 위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시켜야 한다(当代財經 1989, 9 재인용). 비록 근소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두 시각 모두 선진국과 개도국 간 빈부격차의 축소를 당면 과제로 규정한다는 것이 그 공통점이다.

한편, 중국은 경제발전과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빈곤 국가들과 현재 자신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을 국제경제신질서 수립의 주체로, 브릭스 국가들을 주력 국가들로 보며, 그중에서도 자신이 리더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와 달리 주요 신흥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자신에게 국제경제신질서를 수립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修家棟·劉程 2016, 100). 특히, 중국은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로 요약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모순이 노정시킨 결과로 진단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개도국과 신흥국가들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회의체인 G20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신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 입장을 취해 왔다(李興 2009, 29-30).

이상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국제경제신질서의 내용은 평등한 주권국가로서 모든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결실도 공정하게 분배 및 향유하자는 것이며, 그 질서 구축의 주체는 자신을 포함한 신흥시장 국가들이고, 자신이 그중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협력의 대상은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국이자 수혜국인 서구 선진국들이며, UN과 G20이 향후 그러한 협력의 주요한 장(場)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인식에 따라 상승한 국력을 바탕으로 빈곤국들과 개도국

들이 집중 분포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를 국제경제신질서의 구축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이들 지역을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별 및 네트워크 차원에서 통합시키고자 한다. 개별 지역 차원에서 볼 때,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 유라시아에 걸쳐서는 러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노드(nod)’로서 개별 대륙의 거점 역할을 하며, 이들은 다시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국제경제신질서의 구축을 위한 대륙 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근간을 형성한다. 이들이 주축이 된 다자경제 기구와 구상은 대륙별 노드로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를 연결하는 브릭스 국가들의 신흥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이하 NDB)과 CRA, 아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를 동시에 연결시키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AIIB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 무역 및 금융영역에 대한 중국의 실천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틀을 규정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에 대해서부터 동 체제가 선진국의 주도로 수립되었고 자신을 포함한 빈국과 개도국들의 목소리와 이익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후 개혁개방의 실시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질서에 융합되기 시작했고, 2001년, GATT를 대체한 WTO 가입으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시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WTO의 규정과 제도를 자의적,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개도국의 경제발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정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중국은 지적재산권과 식물유전자 관련 규정 등 선진국들의 WTO 규정의 이용을 통한 압력, 자본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이익추구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비판적이나, 반덤핑제도와 맞물려 있는 중국의 MES 승인 문제가 중국이 불만을 갖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WTO에 가입하기까지 중국은 서구 선진국들의 까다로운 요구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자유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 했다. 그 결

과 중국은 2001년 12월 자유무역체제와 세계경제에 편입됨으로써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의 구실로 사용되는 MES 부여 문제로 WTO의 주요 설계자이자 선진 강대국이며 주요 시장인 미국 및 유럽과 마찰을 빚어왔다. MES 불인정은 제조업 대국으로서 중국에게는 단순한 국가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 요인이며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다(劉學文·朱京安 2015; 李双双 2016). 2001년 가입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국은 MES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고,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연구하기도 했다(李思奇 外 2016). 그러나 2017년 7월 현재에도 중국은 환율과 국유기업 등 국가의 시장개입과 의무 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무역국들은 여전히 중국에 MES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¹⁸⁾ 비시장경제(Non Market Economy) 지위를 탈피하지 못하는 한, 중국의 손실과 불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지속될 것이며, 그 정치적 속성상 미국, 유럽, 일본과의 마찰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을 포함하여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여한 WTO 무역체제 내에서의 발언권 확보와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과 같은 다자무역과 FTA에 의한 양자 무역관계의 동시적 추진으로 자국에 유리한 무역체제와 규칙의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에는 국력의 상승과 경제규모의 확대라는 이유도 있으나,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8%에서, 7%, 다시 6%대로 하락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수출과 투자가 주도한 30년간의 고속 성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위 ‘신창타이(new normal)’ 시대의 도래로 인해 중국은 집권 정당성의 유지와 자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8) 미-중 경제 안보 조사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중국에 대한 MES 부여에 부정적이며, 중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어떠한 MES 승인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미 의회가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MES 부여를 위한 6가지 고려사항은 다음을 참조. 미-중 경제 안보 조사위원회,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Non%20Market%20Economy%20Issue%20Brief.pdf>. (2017년 5월 22일 검색)

이에 중국은 대내적으로 내수의 확대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전략적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서구 중심의 WTO, WB, IMF 등 기존 국제경제질서 내의 주요 다자기구에 대한 개혁과 수정의 요구가 그것이다.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 요구와 함께 중국은 국제개발과 투자, 국제금융과 통화체제에 대해 기존의 규칙과 제도와는 다른, 자국이 주도하는 다자기구와 제도의 설립 및 운영에도 동시에 나섰다. 2014년 7월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인 브릭스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NDB, 이들이 각국의 단기 유동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1,000억 달러 규모의 CRA,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한 AIIB가 그 대표적 예들이다. 2015년 7월 중국은 일대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실크로드 펀드와 함께 AIIB의 출범을 동시에 추진했다.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을 통해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의 형성을 주도하고 이를 플랫폼으로 삼아 자국 주도의 AIIB를 운영함으로써 국제규칙 제정과 다자기구 설립 및 운영자로서 자신의 국제적 역할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10월 논의가 시작되고 2015년 3월 역내 37개국과 역외 20개국 등 총 57개 창립회원국이 참여한 AIIB의 설립 초기 구상은 국수주의적이었고 회원대상국들도 아시아에 한정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일대일로의 금융플랫폼, 국내 과잉공급 해소, 방대한 외환보유고의 활용 등을 통해 중국경제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AIIB를 구상했던 것이다(최원기 2016, 10-11). 그러나 AIIB는 중국이 WB, ADB 등 선진국 주도의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대체 혹은 경쟁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설립 추진 초기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그 설립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가입을 거부하거나 주저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구조, 의결권, 투자 및 대출 관련 규정 등 거버넌스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맹방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방 선진국들의 대거 가입을 이끌어내며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

한 대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중국주도의 AIIB에 동맹국들의 가입을 저지하고, 규칙제정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위협론과 함께 AIIB의 거버넌스 구조와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지속 제기했던 미국은 AIIB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을 외부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미국은 “근시안적이고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Financial Times* 2015/03/16).

물론 그 성공적 출범에도 불구하고 다자개발은행(MDB)으로서 AIIB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는 한편, 기존의 MDB가 지적받아 온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모범사례들을 축적해 나가야 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투자대상국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투자주체국의 일방적 결정을 지양하고, 운영과 의사결정의 독점 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인사 및 운영관련 규칙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미 가입한 서구 선진국들의 견제와 향후 미국과 일본의 가입도 염두에 뒀야 한다.

주권, 국가의 고유한 발전 경로 선택권을 강조하고 ‘색깔혁명’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개발 및 금융기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conditionalities)을 부과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AIIB의 장점으로 그러한 정치적 조건들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¹⁹⁾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은 체제전환의 시도라는 시각에서만 볼 수 없다. 투자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인권, 노동 등 다양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조건의 부재와 함께 중국은 AIIB의 특징의 하나로 신속성을 꼽는다. 중국은 기존 개발금융기구들의 투자대상 선정과 승인, 추후 집행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절한 투

19)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AIIB와 NDB가 기존의 유사 기구들과 다른 점을 묻는 질문에 42.9%가 ‘정치적 조건의 배제’를 택했다. 거부권을 포함한 표결권의 공정성을 선택한 비율은 23.8%, 주도국가(중국)의 정체성을 택한 비율은 19.0%였으며, 투자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11.9%로 뒤를 이었다.

자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 역시 면밀한 검토 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AIIB는 ODA의 제공이 아니므로 ‘투자’은행으로서, 향후 기구의 지속적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상 선정과 투자 집행 과정에서 투자금과 대출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신중하고도 철저한 사전 검토와 승인 및 집행이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국은 AIIB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경제 및 금융질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출범 취지를 살리고 운영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WB, ADB 등 기존의 국제 및 지역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주도의 금융질서 견제와 새로운 금융질서 구축의 의도도 있으나,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들을 보완하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향후 이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이성량 2015, 63; 66).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AIIB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WB, ADB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투명성의 확보, 관리운영 경험의 축적,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흡수 등 순기능과 함께, 아직은 부족한 투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더 많은 투자 개발을 가능케 하는 장점도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²⁰⁾

그러나 다자개발 및 투자금융의 투용자가 투자유치국의 투자주체에 대한 종속이나 호감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존 미국의 원조나 투자에 대한 수혜국들의 대미감정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중국의 경제원조와 투자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감이 있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금회수와 수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투자’은행으로서 AIIB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후과에 노출되는 ‘개발’은행인 NDB가 중국에게 이익만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동맹이나 우호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하에 처하도록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제경제와 금융의 주도권을 쉽게 상실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동맹과 우호국들의 AIIB 가입을 반대한 것,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MES 부

20)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WB와 IMF의 회원국이자 AIIB와 NDB의 설립 주도국인 중국이 향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부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46.5%가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AIIB와 NDB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본 비율은 34.9%였다. WB와 IMF에 비중을 더 둘 것이라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여에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중국의 IMF 개혁요구에 미의회가 보였던 반응 등이 그 방증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이 향후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 주도의 이들 다자금융기구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중국은 향후 미국과 일본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자기 모순적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WB와 ABD에 비해 자본금과 경험이 부족한 것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추가 가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지만, 중국이 그동안 자신의 다자기구 주도의 출발점이 미국과의 제도와 규칙 경쟁이 아니라 공정한 부의 분배, 부의 공동 분배이며, AIIB 가입은 열려 있음을 국제사회에 공언해 왔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된다.

한편, 중국은 달러와 IMF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해서도 개혁을 요구해 왔다. 중국은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자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달러중심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수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은 통화바스켓에 자국 통화인 인민폐를 포함시키고, IMF의 SDR 기능 확대, 자국의 지분 확대와 인민폐의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이는 또한 일대일로구상, 실크로드 기금, AIIB와 NDB, CRA와 상호 연계성을 갖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李巍 2016, 118-125). 그러나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국제적 지위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인민폐의 국제화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환율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달러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인민폐 국제화 노력은 적어도 당분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무역, 투자개발, 금융 등 제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국제경제신질서를 건설하려는 전략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의 추가적 정체성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국제경제신질서 구축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차이퉁(蔡拓 2009)에 따르면, 중국은 신흥 강대국이지만 개도국의 정체성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익과 요구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동번영의 질서를 구축하되,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쉬총리(徐崇利 2012, 204)는 과거 개도국들이 국제경제신질서의 건립을 위해 ‘특수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했다면, 근래 신흥국들은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평등하고 무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국이 개도국으로서 그리고 신흥국가로서 이 두 가지 대우를 모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에 집중되어 온 부를 자신을 포함한 개도국과 신흥국가들에게 이동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재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중국이 개도국 신분을 상실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의 수혜자로 성장할 경우에도, ‘의리관’에 입각한 책임지는 대국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도국들이 보다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허리(何力 2013, 80)도 국제경제신질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동 질서를 실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처방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과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진정으로 획득할 때까지 동 질서의 건설 주장은 가급적 신중히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상의 시각들은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로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이동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재차 이동할 것을 염두에 둔 전략적 경계(警戒)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은 자신이 공언한 두 번째 백년의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실현에 접근하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국제경제신질서의 구축을 추진하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V. 국제안보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천

1. 신안보관의 제기와 확산 노력

시진핑 정권의 등장 이후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국제안보질서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신안보관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신안보관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93년에 제기되고 1996년에 공식화된 개념으로, 중국이 이전부터 자국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워 온 평화공존 5원칙, 독립자주노선, 비동맹원칙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시대에 맞게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조영남 2009, 10).

신안보관은 ‘상호 신뢰(互信), 상호 이익(互利), 평등(平等), 협력(協作)’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개념으로 요약되며, 그 내용과 실현 방법에서 냉전적 군사동맹과는 달리 적을 상정하지 않고 ‘포괄적 안보’와 ‘협력 안보’를 강조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신안보관은 다자대화, 신뢰구축, 군축과 비확산, 경제교류 등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동맹체제와 자국주도의 지역 안보기구에 의한 미국의 안보질서체제가 특정국가나 비민주국가군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외부에 적을 두고 있다면, 중국의 비동맹원칙과 신안보관, 동반자관계의 설정을 통한 안보체계는 적을 상정하지 않거나 내부의 잠재적 적국 출현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관점과는 차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안보관이 제시하는 원칙들은 평화공존 5원칙의 핵심인 ‘주권’과 ‘내정 불간섭’을 최고의 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안보관은 결국 경제발전과 현대화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평화공존 5원칙의 틀 내에서 서구의 ‘협력안보론’을 자신의 기존 안보관과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 조류에 맞도록 수정한 ‘중국특색의 협력안보’라고 할 수 있다(류동원 2004, 130-131).

중국은 자국의 종합국력 상승과 신흥 강대국으로의 정체성 변화에 따라, 기존 강대국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과 동맹에 의한 기존의 안보질서에 대해 ‘중국특색의 안보관’인 ‘신안보관’의 확산과 함께, 그에 기초한 안보레짐을 형성하고자 한다. 금세기 초부터 SCO, CICA에 더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이하 EAS) 창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2004년 출범한 EAS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창설을 추진했으나, ARF의 존재와 회원국의 증가, 특히 2010년 미국의 가입으로 중국 주도의 지역 질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역시 아시아

재균형에 의한 미국의 압박과 포위에서 탈피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연선국가들을 포섭하는 등 외교안보전략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신안보관이 반영된 안보조직으로 중국학자들과 중국 연구자들은 대체로 SCO를 예로 들고 있다. 즉,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안보에 관련된 일련의 규칙제정과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안보 레짐을 창설하고 주도하려 하며, SCO는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류동원 2004, 132). 중국은 또 SCO와 함께 CICA 역시 중국의 신안보관이 투영된 협의체로 인식하고 있으며(이원우 2011, 52), 이 두 조직을 UN과 함께 상호 연계시켜 발전시킴으로써 국제 안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²¹⁾ 이에 따라, 이어지는 절에서 중국 주도의 안보체로서 SCO와 CICA를 안보질서 구축의 실천적 사례로서 살펴본다.

2. 상하이협력기구와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

(1) 상하이협력기구(SCO)

SCO의 전신은 ‘상하이 5국’으로, 중-러와 인접국가 간 국경 확정과 국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1996년 4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회원국으로 출발한 기구였다. 이후 상하이 5국은 국경 확정과 국경지대에서의 신뢰 구축 이외에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라는 ‘3대 악’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경제교류 및 협력 확대 등으로 목표와 의제를 확대시켰고, 2001년 6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며 SCO로 정식 출범했다.

SCO는 출범 이후 미국과 서방에 의해 NATO에 대항하기 위한 다자안보기구로 의심받아 왔다. 중국은 이에 대해 SCO는 ‘동맹이 아닌 동반자’ 간 기구임을 강조하고 동 조직이 NATO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동맹조직이

21)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국제안보 영역에서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중국학자들 중 85.7%가 UN안보리를 선택했으며, 이어 80.5%가 SCO를 선택했다. NATO는 65%를 차지하고 ARF가 61%를 차지한 데 비해 CICA를 선택한 비율은 51.3%였다.

안보를 강조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듯, 경제와 사회문화,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회원국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SCO를 안보기구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영역에서의 성과와 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안보차원에서의 성과와 진전은 가시적이라는 측면에서 SCO를 안보기구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SCO의 회원국들은 2002년부터 양자 및 다자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2002년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대테러 합동훈련, 2005년 8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군사훈련인 ‘평화임무 2005(Peace Mission-2005)’, 2007년 SC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한 ‘평화임무 2007’ 등은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특히, 2005년 및 2014년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 ‘평화임무’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이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교차하는 한반도와 마주한 산둥반도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은 SCO의 안보적 성격과 범위 설정이 중동부터 극동까지를 커버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지도부와 관료들도 SCO의 안보적 성격의 확대와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5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SCO 외무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SCO가 지역 안보와 안정의 보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The Diplomat* 2015/06/05), 이듬해 1월 멩젠주(孟建柱)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또한 타지키스탄 출신의 알리모프(Rashid Alimov) SCO 신임 사무총장에게 동일한 내용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Shanghai Daily* 2016/01/27).

SCO는 안보적 성격의 강화와 함께, 회원국의 추가 가입 승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구와 안보 영향력의 범위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기 시작했다. 2001년 6개국으로 출범한 SCO는 그동안 회원국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후 논의과정에서도 그 대상국가들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 이들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 자체에 대한 이견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나 절차가 마련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2015년 러시아 우파(Ufa)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읍저버 지위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식회원국 가입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듬해인 2016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정식 가입을 위한 의무각서(Memorandum of Obligations)에 서명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7

년 6월 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Astana)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SCO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식 회원국 가입을 승인했다.²²⁾ 이 두 국가의 가입으로 SCO회원국 인구는 전 세계의 40%로 늘어났고, SCO는 향후 지역 안보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옹저버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란의 가입 여부와 터키의 가입에 대해서도 향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SCO의 안보적 성격 강화와 회원국 확대는 미국과 NATO의 경계심을 제고시킬 수도 있으나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SCO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보 공백을 일정 수준 메우고 있고, 일대일로의 추진과 실크로드 펀드, 미국의 동맹과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AIB의 투자 및 개발 대상지역의 국가들이 회원국이라는 점, 유라시아를 잇는 자원과 물자의 중심 통로에 위치한 국가들이 가입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회원국들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 기구를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나 미국 주도의 NATO에 대항기구로 만들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으로, 이 두 국가와 중·러 간의 양자 및 다자적 역학 관계를 감안할 때, SCO가 미국이나 유럽 혹은 아시아 국가들 어느 일방에 편향되거나 이들을 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규범적 차원에서도 안보 대립적 성격의 강화는 SCO의 설립과 운영의 기본 이념인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화 존중, 공동발전 추구’라는 ‘상하이 정신’과 중국이 꾸준히 제기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신안보관’에 위배되어 오히려 그 설립의도와 ‘신안보관’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역효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볼 때, SCO는 민주성, 개방성, 포괄적 안보 등 협력안보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전통 안보적 성격의 강화와 확대 경향에도 불구하고 비전통 안보적 차원의 협력 강화와 함께 경제협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오고 있는 다자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대일로, AIB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 국가들도 포괄하는 경제교류와 협력 및 실천이 복합적으로 중첩되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자기구로서, SCO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

22) 상하이협력기구, <http://eng.sectsco.org/news/20170615/299812.html>. (2017년 7월 10일 검색)

와 동맹에 의한 안보체제와는 다른, 중국의 신안보관이 투영된 안보 기구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CICA)

중국 주도의 주요 다자안보체로 SCO와 함께, CICA를 들 수 있다. CICA는 원래 1992년 10월 개최된 47차 UN총회에서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제의하여 창설된 협의체로, 처음부터 중국이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소련의 해체와 냉전의 종식, 신생독립국들의 탄생과 역내 포괄적 안보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효율적이며 수용 가능한 국제조직으로서 CICA의 설립제의를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2001년 9.11테러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비전통 안보위기가 상승하기 전까지 CICA는 다자안보기구로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99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로 인해 CICA는 2002년 6월 첫 정상회의부터 테러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현재에도 테러는 CICA의 중요한 의제로 남아 있다. 서부의 분리 독립 움직임과 관련된 빈번한 테러의 발생으로 고민하던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대테러 움직임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CICA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덩샤오핑 이후 국제정세의 대세를 ‘평화와 발전’으로 규정하고, WTO에 가입하여 경제성장에 매진해야 했던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협조와 함께 자국 내 분리 독립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데 더해, 미국의 관심이 중동으로 전환되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때마침 2001년 출범한 SCO와 함께 2002년 본격 출발한 CICA는 중국이 표방하는 신안보관의 중요한 구현체이자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로서, 중국에게는 향후 국제안보체도와 규칙제정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CICA의 회원국은 26개국으로, SCO보다 4배 이상 많다. 중동의 이집트, 이란, 이라크,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은 물론, 동남아

시아의 베트남, 태국에 이어, 동북아의 한국, 몽골까지 중동과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CICA의 회원국이다. 미국과 일본이 정식 회원국이 아닌 상태에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이런 CICA를 통해 안보와 발전의 주체로서 아시아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동맹에 의한 안보, 냉전적 사유와 영합적 사고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안보관을 확산시키고 이를 구현하려 한다.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CICA 제4차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의 이런 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몸은 이미 21세기에 들어왔는데, 머리는 아직 냉전적 사고와 영합적 게임의 구시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아시아의 안전은 결국 아시아인들이 보장해야” 하고, “발전은 안보의 기초이며, 안보는 발전의 조건”이라는 것이다(『人民网』 2014/05/21).

그러나 안보적 측면에서 CICA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먼저, SCO만큼 제도화되지 않은 조직이며, 회원국의 수가 많은 만큼 정체성과 이익의 다양성으로 쉽게 응집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테러’라는 CICA의 주요 관심사는 SCO의 주요 의제의 하나로서 겹치며, 두 조직 모두 전통안보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전통안보 측면에서의 신뢰구축과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역할과 기능이 중첩된다. 게다가 회원국들은 2014년 상하이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하며 동 회의체의 국제기구화에 실패했으며, 이후 2016년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도 CICA의 제도화에 미온적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SCO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CICA의 중요성이나 미래를 경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중국은 그동안 CICA의 제도화와 타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추진해왔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CO와 UN은 이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CICA 역시 2007년 UN을 비롯하여 4개의 국제조직에서 옵저버 자격을 확보했다. 2016년 12월에는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²³⁾ 주목할 만한 것은, 이에 앞서 2014년 중국이 SCO와

23)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 http://www.s-cica.org/page.php?page_id=13&lan

CICA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시킴으로써 UN, SCO, CICA를 연결시켰다는 것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⁴⁾ 즉, 중국은 CICA를 단독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고, SCO 및 UN과 연계시킴으로써 중동과 아시아의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그리고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동맹에 의한 안보체제와 그 체제에 내재한 냉전적, 영합적 안보관을 비판하고 국제안보질서의 규범과 무게중심을 자신의 신안보관, 자신의 발언권이 작동하는 UN과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세력전이론에 의하면 국제체제는 위계적이며 그러한 위계적 질서 내에서의 제도는 최상위 강대국에 의해 형성된다. 부상하는 강대국은 기존 강대국에 의해 형성된 기존 제도에 자신의 이익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만을 갖게 되고, 기존의 제도에 대한 수정을 도모하게 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G2로 도약했으며, 기존 강대국 미국에 대한 세력전이의 당사자로 언급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신흥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사회주의국가, 개도국, 비서구 국가 등 다양한 기존의 정체성에 더해 중국은 G2, 즉 신흥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추가 획득한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 인정하듯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이 수립한 기존의 개방적, 자유주의적 성격의 국제제도와 규칙의 최대 수혜자이자 그 틀 내에서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신흥 강대국으로서 자신이 규정하는 이익을 더 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해 왔고 그에 따라 기존의 규칙과 제도에 변화를 가하

g=1. (2017년 4월 11일 검색)

24) SCO와 CICA는 2017년 8월 27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EXPO 2017 기간 중 'SCO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제 마라톤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상하이협력기구, <http://eng.sectscsco.org/news/20170710/308364.html>. (2017년 7월 17일 검색)

려는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의 불만과 개혁요구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현재의 중국은 기존의 국제규범과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수정의 요구를 이전보다 빈번하고 강도 높게 표출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중국의 종합국력 상승과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이익의 확대이며, 실제로 중국은 자신이 규정한 이익, 특히 소위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물리적 수단과 함께, 서구가 제정하고 해석하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대해 대항담론을 제기하며 규범경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기존 정체성에 더한 중국의 신흥 강대국으로의 정체성 변화, 그리고 서구 강대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 운영된 기존 국제질서의 불공정성이라는 두 요인은 중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정치경제제도에 대해 불만을 품게 했고, 중국은 국력의 상승을 계기로 기존의 규칙과 제도에 대해 선택적 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변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선택적인 이유는, 종합국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질적 우위, 정치적 측면에서의 소프트 파워 부족 등 미국과의 종합국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기존 국제제도 내에서 성장했다. 이는 곧 기존의 국제제도가 중국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었고, 그러한 제도가 중국이 배제된 채 운영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은 UN, NPT, IMF, WB, ADB, APEC, WTO 등 대부분의 세계 및 지역 다자제도와 기구에 대한 참여자이자 수혜자였고, 2001년 ‘전략적 기회의 시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단순한 ‘참여자’에서 점차 ‘제정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처럼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국력상승에 상응하는 이익의 획득을 위해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국제규범과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강대국화 과정에서 구상하는 국제제도와 규칙의 모습은 기존의 제도와 체제에 대한 전면적 수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강대국

화를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국은 기존 국제체제 내에서 권리는 최대화하고 의무는 최소화하고자 했다. 동시에, 기존 체제의 순기능과 장점은 수용하되, 신장된 자신의 국력과 정체성에 기초한 대내외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미국과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안보체제가 노출시켜 온 기존 규칙과 제도의 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과 선택적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경제질서의 변경 노력에서 중국은 자신과 유사한 정체성 혹은 경제적 이익을 가진 브릭스국가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WTO, IMF 등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발언권의 강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규칙 수용자, 개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AIIB, NDB, CRA의 설립과 인민폐 국제화 추진, 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G20의 제도화 추진 등을 통해 기존의 국제경제제도와는 차별화된 자국 주도의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규칙 제정자로서의 모습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국제경제질서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규칙 제정자의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안보적 측면에서 규범과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한계를 보인다. 국제경제질서의 건설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남미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포괄하며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행위하는 데 비해, 안보 레짐과 제도 차원에서는 중동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극동아시아까지 아시아를 주요 범위로 설정한다. 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은 동맹을 포함한 미국과의 현저한 군사력 격차와 정체성에 기인한 소프트 파워의 한계로 인해, 신안보관의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UN이라는 제도적 틀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다자안보체제를 추동하고 있다.²⁵⁾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걸쳐 양자 및 다자동맹을 형성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 전통

25) 본 연구 설문조사 대상자의 54.5%가 신안보관의 제기와 확산이 성공적이라고 보았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9.1에 그쳤다. 다만,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조직이 성공적인 편이라고 평가한 비율과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비율은 27.9%로 같았다.

안보차원의 군대 주둔이 없고, 중국 주도의 SCO와 CICA 역시 아태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신안보관의 확산 노력과 이에 기초한 UN, SCO, CICA의 연계, 발전, 확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한 기존의 안보질서를 변경시킬 만큼의 군사적 역량을 축적하지 못했으며, 국제사회는 물론 역내 국가들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⁶⁾ 이는 강대국화 과정에서 신안보관에 의한 자국 중심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측면에서 기존 국제 규범과 질서에 대한 중국의 개혁 시도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과 범위에 국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6) 본 연구 설문 중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와 안보조직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견제의 성공 여부에 대해 16.3%만이 '성공적'이라고 답했고, '그저 그렇다'는 대답은 39.5%였으며, '성공적이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류동원 (2004).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pp. 130-131.
- 이성량 (201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의미 및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pp. 55-74.
- 이원우 (2011).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국제정치논총』. 제51집. 1호, pp. 33-62.
- Breslin, Shaun (2010). “China’s Emerging Global Role: Dissatisfied Responsible Great Power.” *Politics*. Vol. 30. No. s1, pp. 52-62.
- Buzan, Barry (2010). “China in International Society: Is ‘Peaceful Rise’ Possibl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 No. 1, pp. 5-36.
- Combes, Katherine (2011). “Between Revisionism and Status Quo: China in International Regimes. China’s behaviour in the global trade, non-proliferation and environmental regimes.” *POLIS Journal*. Vol. 6, pp. 1-37.
- Ikenberry, G. John (2008).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pp. 23-37.
- Johnston, Alastair Iain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pp. 5-56.
- Kang, David C. (2003).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pp. 57-85.
- _____ (2005). “Why China’s Rise Will Be Peaceful: Hierarchy and Stability in the East Asian Region.”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3. No. 3, pp. 551-554.
- _____ (2007).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nt, Ann (2013). “Chin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Zhang, Yongjin and Greg Austin (ed.). *Power and Responsibil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Canberra, ACT: ANU E Press, pp. 132-166.
- Kim, Samuel S. (199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hinese Foreign Policy.”

-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19, pp. 140-157.
- Men, Honghua (2014). "China's National Identity in Transi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1982-2012)." *Social Sciences in China*. Vol. 35. No. 2, pp. 194-203.
- Morgenthau, Hans J. (2005).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The McGraw-Hill Companies.
- Organski, A. F. K. (1968).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 Shambaugh, David (2013).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Oxford: OUP.
- Wend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pp. 391-425.
- Womack, Brantly (2015). "China and the Future Status Quo."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8. No. 2, pp. 115-137.
- Xiang, Lanxin (2001). "Washington's Misguided China Policy." *Survival*. Vol. 43. No. 3, pp. 7-24.
- Zhao, Suisheng (2016). "China as a Rising Power Versus the US-led World Order." *Rising Powers Quarterly*. Vol. 1. No. 1, pp. 13-21.
- 掘中浩 (1982). "國際經濟新秩序理論的發展." 『國際經濟評論』. 第7期, pp. 13-19.
- 劉學文·朱京安 (2015). "國際貿易救濟中我國非市場經濟地位的困境與突圍." 『經濟問題探索』. 第4期, pp. 120-126.
- 李思奇 外 (2016). "2016年中國獲得"市場經濟地位"的前景: 美國因素與中國策略." 『國際貿易問題』. 第3期, pp. 151-160.
- 李双双 (2016). "中國"非市場經濟地位"問題探." 『國際貿易問題』. 第5期, pp. 71-81.
- 李巍 (2016). "中美金融外交中的國際制度競爭." 『世界經濟與政治』. 第4期, pp. 112-138.
- 李興 (2009). "國際秩序新變局與中國對策的思考." 『現代國際關係』. 第11期, pp. 29-30.
- 徐崇利 (2012). "新興國家崛起與構建國際經濟新秩序." 『中國社會科學』. 第10期, pp. 186-204.
- 牛新春 (2014). "中國國際身份芻議——國際橫向比較視角." 『現代國際關係』. 第12期, pp. 10-16.
- 蔡拓 (2009). "中國在國際秩序轉型中要有所作為." 『現代國際關係』. 第11期, pp. 30-32.
- 佟家棟·劉程 (2016). "全球化調整期與國際經濟新秩序中的中國定位." 『中共中央黨校學報』. 第20卷. 第1期, pp. 100-105.

何力 (2013). “國際經濟新秩序의理念和現實.” 『東方法學』. 第2期, pp. 74-80.

2. 기타

김헌준 (2016).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경쟁.” 동아시아연구원.

조영남 (2009).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지속.” 동아시아연구원.

최원기 (201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當代財經 (1989). “何謂國際經濟新秩序.” 『當代財經』. 第8期.

“China stresses security cooperation as new SCO Secretary-General takes office.” *Shanghai Daily*. January 27, 2016.

“China Urges Greater Security Role for the SCO.” *The Diplomat*. June 5, 2015.

“US should work with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Financial Times*. March 16, 2015.

“携手行動 傳遞信心 創新發展——解析習近平G20杭州峰會主旨講話和致辭.” 『人民網』. 2016년 9월 6일.

“習近平在亞信峰會作主旨發言(全文).” 『人民網』. 2014년 5월 21일.

미-중 경제 안보 조사위원회.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Non%20Market%20Economy%20Issue%20Brief.pdf>. (2017년 5월 22일 검색)

상하이협력기구. <http://eng.sectsc.org/news/20170615/299812.html>. (2017년 7월 10일 검색)

_____. <http://eng.sectsc.org/news/20170710/308364.html>. (2017년 7월 17일 검색)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 http://www.s-cica.org/page.php?page_id=13&lang=1. (2017년 4월 11일 검색)

유엔문서. <http://www.un-documents.net/s6r3201.htm>. (2017년 9월 12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7년 08월 11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8월 28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9월 18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3 (2017)

China's Perception and Behavior toward the International Order as a Rising Power

Hee-Bok Yoo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Since the opening-up and reform in 1978, China has emerged as a rising power based on its steady economic growth. As a result, Western developed countries, mainly the United States, that designed and establish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have raised concerns that China, as a rising power, will seek to change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China argues that it has grown with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and therefore has no reason to revise it. As a result,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focused on China's state orientation, whether it is a status quo power or a revisionist power, and many related research results have been produced.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China's state orientation, and it seems that there are more views on China, though discontent with the established order, as a status quo power, than as a revisionist power. Besides, there are claims that,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defining China's state orientation, there needs to be more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researches related to the emergence of China, including the desirable international order,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and the status and role of China in it, China's vision of international order, etc.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China has consistently raised complaints and required reforms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ules, despite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China's own claim that China is a status quo power.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of the complaints and reforms that China has raised as a rising power and its related actions based on its multiple identities such as socialist country and Asian country, and argues that such actions are intended to supplement and reform rather than to make a full-scale revision, being pursued as part of China's great power strategy.

- Key words: China, Rising Power, International order, State orientation, State identity